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 이재삼 (인)

일시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장소	고양 장성중학교
대상지역	고양 파주
참가인원	관리자 : 20명
협의내용	
<p>논의 1. 용의 복장 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 학부모 · 교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실시하고 있음 2. 스스로 지키게 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학교의 자율권 보장 4. 무조건 자율화는 지양 5. 협의를 통한 규정 제정과 시행이 바람직함 <p>논의 2. 체벌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이 이미 금지되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지도 감독 사항임 2. 교사나 학생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지도 감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학생의 실효성 있는 징계 규정이 필요 → 권고전학의 실효성 문제 및 한계 (의무 교육에서 학생 지도가 매우 어렵다) 3. 학생 인권과 교권이 평행선을 그어나가야 함 <p>논의 3. 야간 자율학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입시제도 개혁 없이 중·고 자율학습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쟁점에 문제가 있음 2. 사회적 현실이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인데 학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3. 현행 각 학교에서 강제학습이 아니라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집단을 편성하여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음. (월수금지, 매일 학습제 등 다양한 편성 운영) 4. 학부모의 요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할 수 밖에 없음 <p>논의 4. 교육지원, 복지강화, 고민상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상담(전문 상담) 체제 운영 필요 2. Wee 센터 운영 확대(Wee Class 계속 유지요망) 3. 지역별 문화예술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함 4. 비행학생에 대한 지도프로그램 운영을 권역별로 할 필요 있음 5. 학생들 중에 비행화하기 쉽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이나 삶의 희망, 고민상담, 복지지원이 필요함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 이재삼 (인)

일시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장소	의정부 녹양중학교
대상지역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참가인원	관리자 : 20명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선생님들께서는 정책적 상황 보다는 설문지 작성과 통계처리 및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만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 광주시 유보, 경남은 노력중이며, 교육청이 직접 구체적으로 하는 곳은 경기도뿐임 • • 학생들과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요구한 것인지? 아님 교육청에서... • 교육감 선거의 공약중 하나로 유권자와의 약속. 또한 시대적 분위기가 여론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음 • 제일 문제가 교권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현재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으나, 별내는 여러 지역에서 못가는 학생들이 오니깐.. 몇 분만 경력자로 신규 여교사가 많은 관계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있음.. 상대적으로 교권이 위축되고 생활지도시 제약이 나타나지 않을까 교육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인권보호를 요구할 때는 학생에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인권만을 주장하지 개인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무책임. 타인에 대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 상대적 모순으로 나타남. 학생이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당연히 인권 보호가 된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음. 학생 학부모 모두 같음 • 권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는 함께 가야 함. 조례제정은 쉽지 않은 문제임. 교육위원회에 안건이 넘어왔을 때 학생인권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도 된다. 도의회로 가서 최종 확정까지의 절차까지는 과정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시일이 걸릴거라 생각됨. 인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나타나야 할듯함 • 선언적 의미로의 내용이 많음. 생활지도의 예민함이 별로 없다고 느껴짐 • 강론에 들어가서 조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문제보다는 상징적 의미로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학생생활지도도 학생인권보장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도모되지 않을까 생각함. 선언적 의미에 대한 것이 큰 의미라 생각됨 • 중학교 있다 의정부공고 9월1일자로 옴. 중학생들이 경찰서 가서 인권을 이야기함. 아직 14세가 안되어 6시되면 집에 간다는 점 악용함. 현 조항도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됨. (학생이 수업 중 핸드폰 수거를 해야 함. 학생과 학교가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집어 던지면서 칠판과 핸드폰이 부서짐. 부모가 학생을 보호시설에 가두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선생이 맞았으면 넣을 수 있었는데..)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교권에 대한 보호가 없으며, 학생이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가능 교권확보의 문제점 	

- 고등학교 학생부장회의 시 학생인권이 강화될시 학생부장이 체육교사가 많았으나.. 현재는 여교사가 많음. 말로 되는지 ... 부모가 체벌해서 키울 수 있는 집은 없을 것이다. 군대도 체벌은 사회적 분위기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체벌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기며, 이러한 시기를 고민하고 있음
- 의무라는 부분의 행정력의 힘의 부분이 당사자가 행정력에 순응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가 형성되었을때 가능하나, 현재는 중학교는 퇴학, 회초리, 심하게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설득만 가능하나, 지금의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예를 들어 교장이 집에서 머물거나, 전학 등의 행정 명령 시... 부모가 들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닌 누구도 인정하는 않는 문화이다. 현재 학생인권의 말은 좋으나 행정력이나 마지노선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인 듯 하다. ... 교장이나 교사나 모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회피가 생기며 교육에 포기가 나타남. 인권은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 판단됨. 과도기적 시점에서 성급
- 그런 우려의 여론이 많다. 본 협의회는 토론보다는 제도적 행정적 보안의 문제를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각도가 다르나 필란드 교육은 사교육 없이 저비용 고효율로 학력이 최고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도 사회적으로 주당 근로시간과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되고 있으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고3은 새벽에 나가서 독서실과 학원을 갔다 오면 새벽이다. 이들은 중1~고3까지 6년간을 1일 학습 노동을 받고 있다. 아이들이 소중한 삶의 청소년 시기가 우울한 삶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삶의 기대치를 주고, 격려를 줄수 있는 접근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것이 조례제정이 되었다면 학교현장에서 생활지도에 크게 요동칠거라 생각되지 않을 거라 생각됨. 다만 접근의 방법이 문제다. 체벌이 사회적 문제로 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학교교육이 과거와 현재가 어렵고 힘들거라는 판단이 ..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1학급이 10명 전교생 100명인 지역과 우리처럼 40명과 몇백명과는.. 생활의 격차와 다양한 요건에 대한 다른 면에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작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 진다 했을때 학교가.. 달라지지 않을거라 생각함
- 그건 아니라 본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본다면.. 교육적 행동이나 인권 행동이나가 중요한 문제라 파악된다. 소지품 검사시 인권접촉이라는 권고가 나온다면 성인으로 본다면 학교교육의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인성교육보다는 단순한 지식전달자일 뿐이다. 교육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징적 제도가 생길때 현장에서는 크다.
- 조례난 법률은 ... 지금 현재의 법적 근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교육계 내에서의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함. 학생들의 책무성을 자율성과 자치정신을 강화시켜서 학생 스스로가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함.
-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현장의 책임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교사가 잘못했다는 결과로 귀결이 된다. 훈육의 방법이 가정안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부모도 자기 자녀를 교육할 수 없는 시점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접촉사항이 많은데도.. 위험 감수를 하면서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가 나타남.

- 네. 말씀해주신 것이 교육계 내의 여론입니다. 교권과 생활지도의 다른 수단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조례만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나
- 조례 제정의 계획은 언제?
- 현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6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다.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위를 열고 있고 하니 11월에는 조례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외부 용역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것을 맡겼다. 용역내용이 나오면 12월에는 회의가 없으니 내년으로 넘어갈듯
- 학생인권의 상대는 교사다. 똑같이 교권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같이 가야 할 것 같다. 교권보호 측면의.. 조례제정 이후 교권보호가 안된다면 교사가 다치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조례라 판단됨. 교사-학생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조례가 깊이 검토되어야 함. 교권과 학생인권의 보호 측면을 하다보면 서로의 허점이 있고 다툼이 있을수 있다. 소송까지 갈 수 있음. 그러한 판례를 가지고 검토후 현명한 제정이 필요하다 생각됨. 많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었으면 좋게쌌.
- 조금하지 않게... 다른 시도에서도 인권위를 만들 분위기가 아니라 생가되어 중단되었는데.. 현재 우리는 교장의 운영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용역의 조례를 검토후 공청회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다.
- ppt 발표시 학생인권이 교사와 학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학교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교사의 권리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은 약화되는 것이다. 예시가 잘못된 것이다.
- 그런 의도가 아닐것이다. 학생인권 추진시 보수적이 분중 한분이다.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학생 생활지도가 사할이 걸린 문제가. 학생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까하는 부담이 크다. 생활지도의 사안이 발생시 행정적 책임의 문책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의 구조도 안다. 하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아이들이 불쌍하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불쌍하다.
- 저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잘 키워야할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다.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인재를 키우라는 것이다. 인성, 학량향상의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저 밑으로 내려간다. 공교육 신뢰를 열심히 하려고 방과후 활동도 하고 .. 여러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의 대상은 모두 학생이다. 모두 교과부의 지침과 제도에 구현하는 것이다. 밖에서 보니깐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것은 ... 사회제도가 입시제도가 뻑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좋은데 가기위해서는 그 과정이 경쟁시대라 만만치 않다.

- 교육계가 받고 잇는 책무다. 모드는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만들때 필연적으로 강제야 자입니다.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구조적으로 같이 말물려 가야 한다. 학원교습시간 10 시 이전 조례는 다음주 심의를 하지만, 경기도학원연합회 간부들이 어래전부터 농성 중이다. 그 내용이 학교야자 폐지하면 그 이후 10시 전까지 우리가 교육할 수 있다. 아이들의 몸은 하나인데.. 공교육과 사교육시장이 결국은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느끼고 즐기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아이 들의 삶을 생각 못하는것 같다. 하나의 제도 구현시 연동해서 풀어야 할 것임을 교육 감도 알고 있다. 야자도 강도가 제일 센곳이 수원이다. 예를 들어 수원 일류고등학교 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부를 안하는 밑바닥 학교 아이들도 붙들려 있으니 문제다. 과감히 야자 안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학교장이 아무도 없다. 제도적으로 풀어주어야 할 부분이다. 저비용 고효율이 공교육에서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다.. 현재는 우려가 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설문지 통계를 내서 보도자료를 낼 것이다. 학부모 교원, 관리자, 학생의 의견을 구분해서 통계치 발표, 전체의견을 발표하고 방향제시함
- 그렇다면 제목 자체를 인권을 다른 말로 바꿀수 있지 않나? 언어에서 파장되는 부작용을 심도있게 감안하여 단어 자체를 축소화 한다든지.. 가장 1순위가 야간자율이라 생각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 삶의 질과 ... 스트레스가 교사와 학부모에게 나타난다. 향후 10~20년후가 걱정된다.
- 의사 전달은 하겠다
- 학생인권이 교육감의 의지로 진행시 .. 학부모에 대한 의견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학교가 진다. 현재는 경찰서에 학생부장이 밤늦게 찾아간다.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 넣기는 하겠지만, 행정력은 못미친다.
- 선언적 의미로라도 필요하다.
- 현장하고는 어려움이 많다. 급식 안주면 해정력이 ..?????
- 밥값 안내고 버텨도 받을 필요 없다.
- 직영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손해를 본다. 돈을 낸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학생들의 문화 수용이 안되어 있는데... 권리만을 강조한다.
- 먼길까지 오셔서.. 끝이 없는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 잘 들었으며 짧은 시간동안 필요하신 의견은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시고, 학교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김 규 영 (인)

일시	2009. 11. 02
장소	안산 광덕중학교
대상지역	안산, 시흥
참가인원	관리자 : 13명
협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나 기준은 있는가? -관리자로서 당연한 질문이며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책임도 교사나 관리자에게 있으므로 학생들 스스로 민주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고,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교권확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내용과 유사한 의문점은 인권조례 사전협의 자료 47쪽을 10문10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경남의 조례예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경기도 조례는 어떻게 제정 할 것인가? -경기도 조례는 선행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자문위원들 연수와 협의를 7차에 걸쳐 진행하고 학습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외사례, 국내사례를 종합 검토하고 각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일방 통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례안 제정도 중요하지만 일선학교 자율권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 할 것인가? -큰 틀은 조례로 지정하지만 일선학교의 자율권을 모두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일선학교에 상담교사 배정과 원로교사 인력을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길 기대한다. -건의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칙이나 규율을 어긴 학생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수교재 26쪽 Benposta 어린이공동체에서 학생은 스스로의 주인, 삶의 기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훈련하도록 만든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즉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학생으로 지도하고 책임을 다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이미 조례내용이 어느 정도 제정된 후 명분을 세우기 위한 절차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개주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하게 된다.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자문위 홈페이지 안내) ◆ 일선학교에서는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학생 수는 많아 교원들의 고충이 많다.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과밀 학급 등) -많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로 단 시간 내 해결은 어렵겠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김 규 영 (인)

일시	2009. 11. 03
장소	안양 비산중학교
대상지역	안양과천, 군포의왕
참가인원	관리자 : 12명
협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인권조례 제정이 왜 필요한가? -교재47쪽부터 55쪽까지 읽어보시기 바라며 오히려 조례제정으로 관리자들이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문이 많이 있다. • 홍보 PPT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좋은 자료를 개발 하겠으며 우리 홈페이지에 적극 의견을 올려줄 것을 기대한다. • 학생인권보다 학생의 역할, 책임을 중시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당연히 학생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도 함축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 학생의 인터넷예절 부문도 인권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문이며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연계된 내용이다. <p>(건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인권조례제정’ 제목을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함축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겠는가? • 조급하게 조례제정을 하지 말고 1년,2년 정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겠는가? • 학생들은 미완성된 인격체임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을 함이 타당하다 • 교사가 지도해야 될 내용과 범위를 규정에 담아주길 바란다. • 학생 인권이란 어휘를 학생 학습권 보호 등으로 바꿈이 어떨겠는가? • 교사의 입장에서 교권과 상반된 내용을 조정해주길 바란다	

사전협의회 보고서

보고자 : 곽노현(인)

일시	10월 29일 목요일
장소	고양 장성중학교
대상 지역	고양, 파주
참가인원	관리자 13명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동의)• 문제는 조례나 학교규정으로 아무리 정해 놓아도 위반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없다는 데 있다. 자율적으로 정한 건 꼭 지키게 하는 방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대입경쟁과 교과과정 건드리지 않고 학생인권 등 얘기해 봐야 너무 한계가 명백하다.•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4개월짜리 인턴 전문상담교사가 왔는데 두 달 만에 학생들이 부드러워지고 학교가 조용해졌다. 정말 효과를 실감한다. 반드시 일반화, 상시화 되어야 한다.• 고민상담, 진로상담 등 학생전문상담제도에 예산지원 대폭 늘어야 한다.• 학습에 흥미와 소질이 없는 학생들도 예체능활동 활성화로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접근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고에는 정신적으로 예민한 애들이 더 많다. 심리치료 및 정신과 상담전문가도 있어야 한다.• 문제학생을 조기발견해서 적절한 상담치료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준화 지역 여부에 따라서 야자 등에 대한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평균적 기대도 다르다. 이런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하나밖에 없어서 다 금쪽같은 자식들인데 많은 가정에서는 정작 돌아가면 보호할 가족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 좋겠다. 퇴학도 못 시키니 답답하다. 권고전학도 학부모가 안 간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 말발이 서지 않는다.